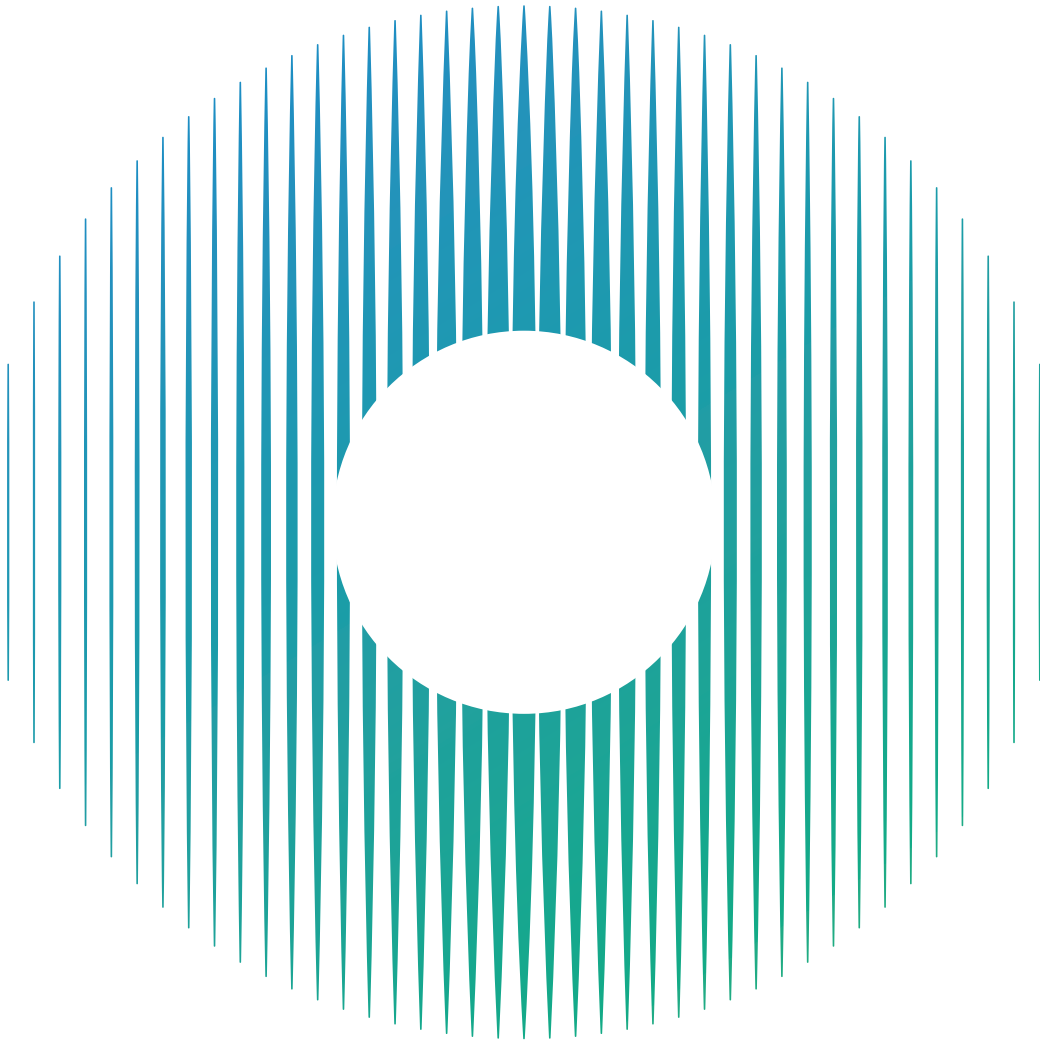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2025년, 4월. vol. 02(격월간)



발행인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발행처 금융산업공익재단 정책연구회
발행일 2025년 4월 25일
제작 (주)현대아트컴

CONTENTS

이슈 노트

한국 사회적기업의 위기와 기회

배정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사업 소개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테마 칼럼 1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사회적금융

박향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테마 칼럼 2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와 미국의 대외 원조 삭감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전 유엔대사)

한국 사회적기업의 위기와 기회

배정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서론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환경오염, 빈곤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체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해 왔다. 사회적기업은 ① 사회 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며, ② 운영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고, ③ 수익의 일부분은 거래(판매활동)를 통해 창출되며, ④ 발생한 잉여금의 대부분을 다시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Bonnici et al., 2024). 사회적기업은 1980년대 이후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산되었으며, 제3섹터인 시민사회조직·단체를 중심으로 연대와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발표된 국제 연구 보고서 <The State of Social Enterprise>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약 2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약 2억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onnici et al., 2024). 국가별 사회적기업의 규모는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에 따라 다소 다르게 추정되기는 하지만, 공개된 자료들에 따르면 미국은 약 120만 개, 중국 약 170만 개, 인도 약 200만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영국 약 13만 개, 프랑스 약 10만 개, 독일 약 8만 개, 일본은 약 20만 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Bonnici et al., 2024). 위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회적기업 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데이터에 따라 2021년 기준 3,215개소로 추정되었다. 현재는 2024년 12월 말 기준 3,76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사회적기업포털, 2024). 이는 유사한 경제 수준 및 국토 면적을 가진 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국내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최근 사회적기업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국내 사회적기업의 특성

사회적기업의 특성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및 복지재정 감축으로 인해 비영리조직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프로그램 이용료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판매 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들을 전통적인 기업과는 구분되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개념과 논의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주로 비영리조직의 수익 창출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며, 정부의 법률 제정 및 제도적 지원은 다소 미비하지만 민간 재단의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어 왔다(Kerlin, 2006). 반면,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이후 협회나 협동조합들이 실업문제 및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발달했으며, 정부 및 EU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확산되어 왔다(Kerlin, 2006). 사회적기업의 이러한 국가별 특성 차이는 시민사회의 구조, 복지국가의 구조, 경제발전 수준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Kerlin, 2013). 이하에서는 한국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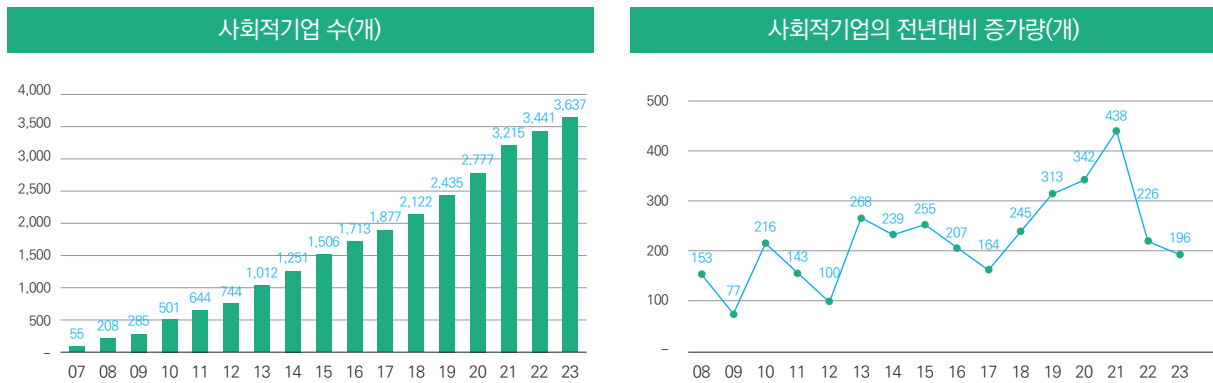
① 정부 주도성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낮은 고용의 질, 사회적 배제의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 주도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유럽 및 미국의 ‘사회적기업’ 개념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경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Bidet & Eum, 2011).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및 육성정책이 시작되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한다. 인증을 위해서는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등 7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일부 요건만을 만족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타 국가와 달리, 한국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제시된 7가지 인증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정부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인정을 넘어서 시민사회를 감독하려는 오랜 국가 주도 전통이 드러나는 부분이다(Bidet & Eum, 2011).

2007년 55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이후, 누적 사회적기업의 수는 <그림 1>과 같이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실질적·개념적 의미의 사회적기업이 아닌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간 사회적기업은 매년 일정 비율(평균 약 22%)로 증가해 왔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자연스러운 발생과 확대라기보다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기반하여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조직의 증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회적기업의 전년 대비 증가량은 연도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매년 약 224개소씩 증가해 왔다.

[그림 1] 국내 사회적기업의 수 및 증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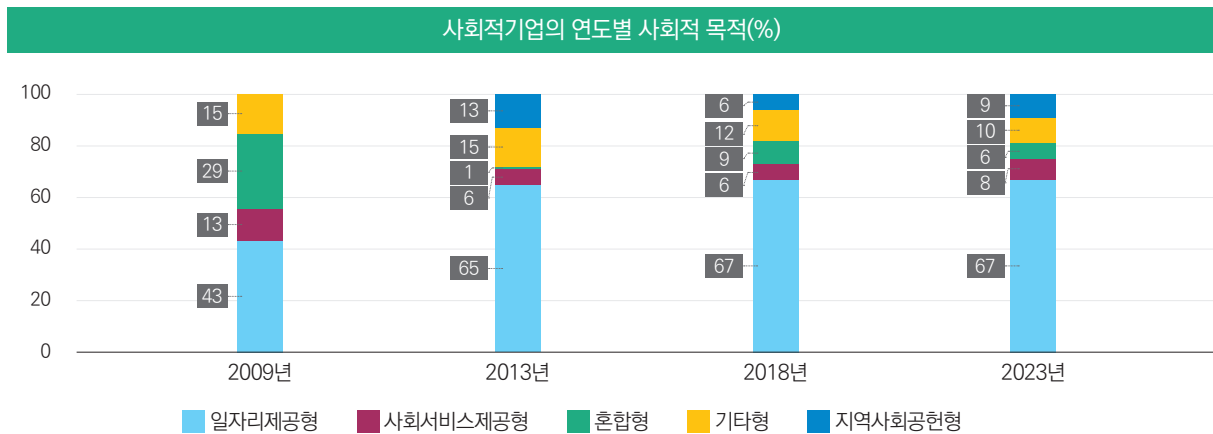


이러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세제 지원, 경영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 왔다. 사회적기업이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받은 전체 지원금은 2023년 기준 356억 원이었으며, 이 중 약 74%인 265억 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사회적기업의 2023년 전체 매출액은 약 7조 2천8백억 원으로, 이 중 공공매출 총액은 약 43%인 약 3조 2천억 원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그러나 2023년 발표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육성'에서 '자생'으로 지원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사회적기업은 또 다른 도전 상황에 직면해 있다.

② 일자리 제공 중심 사회적기업

국내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일자리 + 사회서비스),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인증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체 3,637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2,420개소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67%를 차지한다. 인증제 초기인 2009년의 사회적기업들은 일자리 제공(43%), 혼합형(29%), 사회서비스 제공형(13%) 등 사회적 목적이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나, 2010년 이후 약 70%의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 제공형으로의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1990년대 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논의된 역사적 배경,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 및 인증하는 주무 부처로서 추진하는 정책 구조, 인건비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인증 과정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사회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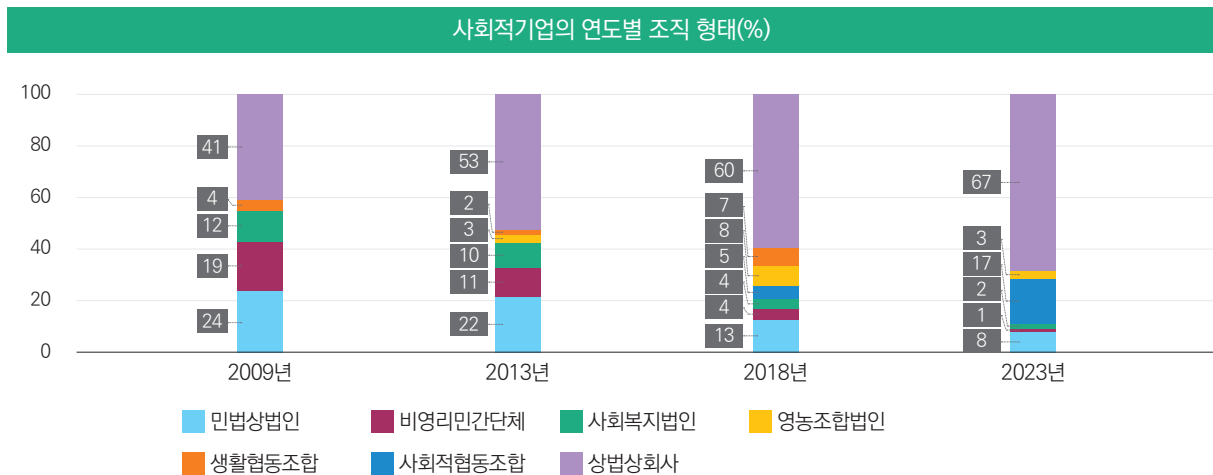


※ 출처: 「연도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자료 분석

③ 상법상 회사 등 영리기업 중심으로 전환

국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조직 형태는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영리법인으로는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 협동조합이 포함되며, 비영리법인으로는 민법상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인증 초기인 2009년 전체 251개 사회적기업 중 민법상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55%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42%, 2018년 25%, 2023년 29%로 감소해 왔다. 반면, 영리기업 중에서도 상법상 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2009년 41%, 2013년 53%, 2018년 60%, 2023년 67%로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며, 2023년 현재 2,447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형태별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기에 사회적기업들이 상법상 회사 중심으로 정형화되어 가는 흐름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조직 형태가 공존하던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균형과 다양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강점인 시민사회의 연대, 상호 호혜,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가 사회적기업 생태계 내에서 점차 약화되고, 영리기업의 혁신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과잉 평가되고 지나치게 강조될 우려가 있다.

[그림 3]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조직 형태*



※ 출처: 「연도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자료 분석

*소수점 이하 자리수는 반올림함

3.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

2023년 9월 정부가 2024년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2023~2027)>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정부 주도 직접 지원 중심 사회적기업 정책은 최근 대전환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핵심은 ① 지원체계의 전면 개편, ②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③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이다(관계부처 합동, 2024). 첫째,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지원 사업 등 정부 주도의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인증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지원사업들이 사회적 가치·성과 평가 등을 통해 지원 여부·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둘째, 그간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에 편중되어 왔으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유도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판로 지원, ESG 경영 확대에 따른 민간·공공기관 협력 사업 확대, ‘소셜 프랜차이즈’를 통한 규모화 지원, 투자유치·금리인하 등 자금 접근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직접 지원 축소 및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반 지원 사업(경영 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 예산은 2023년 700억 원에서 2024년 330억 원으로 52.4% 삭감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예산은 2023년 1,030억 원에서 2024년 477억 원으로 53.9% 삭감되었다(고용노동부, 2024). 그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인들의 네트워크 장이었던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기업 초기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왔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2024년 폐지되었다.

4. 결론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로 확대되어 온 국내 사회적기업 생태계는 최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2023~2027)>의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2024년 정부예산 감축 및 사업 폐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정부의 재정 지원 삭감은 시민사회 운동의 동력이 되어, 탐다운 방식의 사회적기업의 생태계가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연대하여 자생하는 본래적 의미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로 재구조화하여 발전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많은 사회적기업의 생존이 사실상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왔으며(박임수·문경호, 2024), 등록제 도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김혜원 외, 2018)은 오랜 기간 사회적기업 학계와 현장에서 주장되어온 바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경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여 사회적기업이 갖는 근본적인 가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고유한 가치와 필요성은 최근 UN(2023), OECD(2022)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해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생태계는 정부 정책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그간의 정부 중심, 일자리 제공 중심, 영리기업 중심 사회적기업 생태계에서 나아가 다양성과 혁신성을 포용하고, 제3섹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이다.

이를 통해 엄격한 인증 제도를 '통과'한 3,76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한국의 사회적기업 규모로 과소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혁신성, 사회문제 해결, 연대와 상호 호혜 등 사회적기업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호명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부의 직접 지원에 의존했던 사회적기업들은 이제 기업, 투자기관, 민간 재단 등 제2섹터 및 제3섹터의 수많은 민간 조직들과 협력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여,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한국 사회의 비전을 그리며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재구축할 시기이다.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 (2024). 2024 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 ▶ 관계부처합동. (2024).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 전략 -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2023~2027) -.
- ▶ 김혜원·김성기·강대성·박향희·변형석·양동수. (2018).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방안 연구. 사회적기업연구, 11(3), 95-124.
- ▶ 박임수·문경호. (2024). 사회적기업 생존과 정부보조금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4(4), 171-182.
- ▶ 사회적기업포털 홈페이지. <https://www.seis.or.kr> (2025년 3월 24일 접속)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2022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
- ▶ Bonnici, F., Klijn, V., Nowack, D., Bennett, T., & Gregory, D. (2024). The State of Social Enterprise: A Review of Global Data 2013 - 2023. Insight Report. SCHWAB Foundation & The World Economic Forum.
- ▶ Bidet, E., & Eum, H. S. (2011).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History and diversity. Social Enterprise Journal, 7(1), 69-85.
- ▶ Kerlin, J. A. (2013). Defining social enterprise across different context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institutional factor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2(1), 84-108.
- ▶ Kerlin, J. A. (2006).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7, 246-262.
- ▶ OECD. (2022). OECD 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 ▶ UN. (2023). UN Resolution :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

- 수행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신나는조합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Social Value Project Fund)’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8개월간 총 3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연 1%)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여,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사회적 성과 실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 제공형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특히, 기업이 설정한 사회적 성과목표(KPI)를 달성할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환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경영 지원에 힘쓰며 사회적 금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PI 수립부터 실행·성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 파트너십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주요 사회적기업 사례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 『꿈틀 협동조합』은 장애인 치료교사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 아동 대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발달센터를 신설하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주)학교네』는 청소년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진로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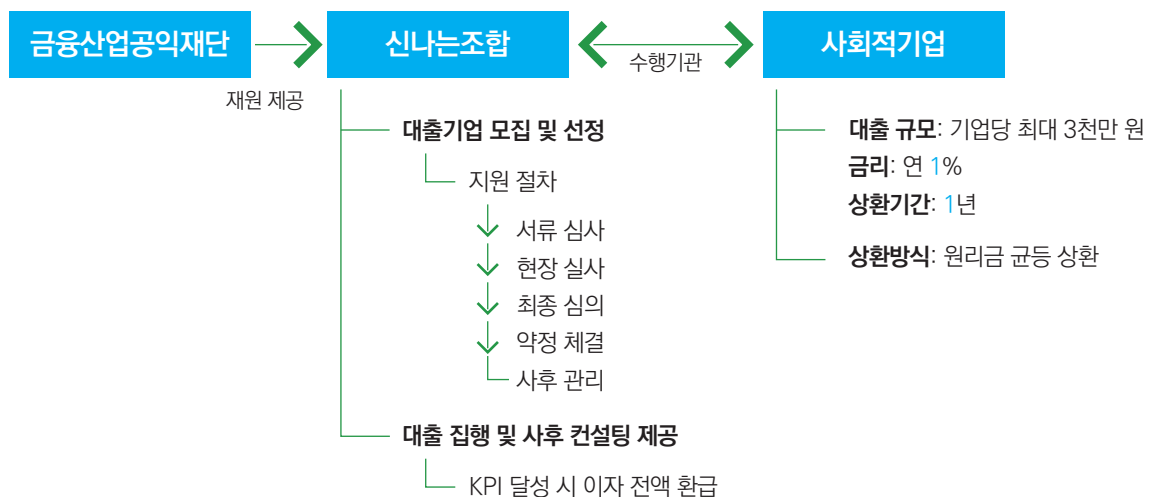
일자리 제공형

- 『(주)나눔』은 지역 농산물(부각, 동결건조 식품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판매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도시농사꾼』은 운송용 냉동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지능형 농장 ‘큐브팜’을 개발·운영하며,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체험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주)이로인터내셔널』은 의류 제작의 불량검사와 포장 등 작업이 가능한 의류완성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교도소 수형자와 취약계층에게 직무 경험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 『(주)코엑터스』는 청각장애인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예술인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예술인 대상 AI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예술인의 디지털 전환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 경로를 설계하고 동반자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용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 추진체계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 기금전달식(2024. 05. 31.)〉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사회적금융

박향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신나는조합은 2000년 ‘가난한 자들의 은행’을 표방하며 한국 최초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사회적금융 약 651억 원, 비금융지원 약 520억 원 등 총 1,171억 원을 조성해서 빈곤층 공동체 창업·경영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등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4년간 사업을 해온 우리 법인은 최근 고민이 많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원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빛을 못 보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나 증가했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원체계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은 요원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이 지원하는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고금리로 무너지는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1% 저금리를 제공하며, 기업별 다양한 사회적가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1% 이자도 인센티브로 기업에 돌려준다. 기업의 금융 문제해결과 새로운 사회적가치 창출 등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의 핵심인 SVI 활용 사회적가치 측정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적 성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사회적가치를 인정하고 그 성과를 돌려주는 사회적금융의 혁신적 시도이다.

사회적금융이 일반적 금융과 다른 점은 포용금융, 인내금융, 관계금융이라는 점이다. 시중은행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금 조정, 기업과 지속적 소통으로 컨설팅, 타 자원연계 등 비금융지원을 한다.

조류독감 등으로 3번 연속 사업에 실패해 신용등급이 바닥을 친 사장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신나는조합의 창업자금 대출을 만났고, 현재는 1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국수 맛집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창업 초반 기세 좋게 성장하던 청년 사회적기업가는 직원 교통사고, 직원의 사업 지참 위반 등 한꺼번에 겹친 악재로 파산을 고려했으나 여러 번의 면담과 심리적 지지로 사업 재기 때까지 이자만 납입하도록 조정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사업 안정을 되찾았다. 본 사업 대출기업 중에는 시설 투자금이 부족하여 납품처를 두고도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출받아 매출 성장을 이뤘고, 장애인, 퇴직시니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기업도 있다.

적정 시기 사회적금융이 제공되지 못하고 개인과 기업이 파산했을 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수치로도 증명이 되며, 한 사람의 삶과 한 기업의 성패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금융의 힘이다.

신나는조합은 재단의 지원으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금융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재단 역시 본 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재단의 사업 추진 전략과 연관이 깊은데, 추진 전략 중 ‘UN SDGs 기반 글로벌 사회공헌-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본사업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와 연결된다. 또한 본 사업은 대출사업이므로 원금이 상환되면 반복해서 선순환 대출이 가능하므로 재단 기금 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이에 재단이 포용금융을 지원하는 선도적 기관으로서 사회적금융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기대해 본다.

2025년은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인데, 이는 UN이 SDGs 달성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한 결과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사회적경제의 연대·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탄탄한 사회적금융 터전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친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02.25.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와 미국의 대외 원조 삭감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전 유엔대사)



유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해 3억 명을 넘어섰다. 역사상 가장 많은 무력 분쟁의 발생과 기후위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군인보다 민간인 희생자가 더 많고, 기후변화로 각종 재해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아동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얼마 전 휴전에 들어간 가자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4만 명 중 3분의 1이 아동이다. 전 세계 아동의 20%가 분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은 무력 사용으로 직접 희생되기도 하지만,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또한 교육 단절에 처할 수밖에 없다.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므로, 이들의 희생과 고통은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19년 세이브더칠드런을 창설한 에글렌타인 잭 여사는 ‘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백 년이 지난 시점에 그 말이 다시 한번 큰 의미를 갖게 된다.

1년 반 전에 방글라데시 콕스바자에 위치한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다. 그곳은 2017년 이웃 국가 미얀마 내의 로힝야 대학살 사건을 계기로 수십만 명이 들어와 현재에는 1백만 명 규모의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다. 그중 절반이 18세 이하의 아동이다. 난민촌 내에는 전기나 통신 시설도 허용되지 않아,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등, TV, 컴퓨터도 본 적이 없다. 교육도 난민들 중 교사 역할이 가능한 사람들이 제공하므로 초등 교육 이상은 받기가 어렵다. 필자가 Korea라는 국가를 아는지 물었을 때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다.

콕스바자의 로힝야 난민촌은 세이브더칠드런 인도적 지원사업의 중요한 현장 중 하나다. 1백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은 유엔이나 국제 NGO 등의 지원으로 생존하고 있다. 연간 총 1조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6,500억 정도가 제공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매년 약 15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곳곳의 인도적 사업들이 금년 들어 큰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이하 ODA)를 대폭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으로서 전 세계 ODA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출범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과 인력 감축의 첫 번째 분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개발협력처(USAID)를 국무부로 통합하고, 전체 대외 원조비의 90%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미국은 전 세계의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국제적 기여 감축은 설상가상이라고 부를 만하다. 아동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공백을 유럽이나 아시아 공여국들이 메우려 노력하겠지만, 당분간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 증대되어야 하는 시점에 반대로 축소되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의 부정적 정책으로 세계적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한 나라가 자신들의 경제위기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웃 나라에 그 위기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가 대외 원조를 줄이면 우리도 줄이겠다는 식의 대응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될 뿐이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인류 모두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 모든 곳의 아이들이 위기 속에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03.06.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